

8년간 국민세금 22억원 줄줄 냈다

조배숙, 2018년 감사 결과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 부정 지급 33% 달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정부지원금 중 22억 원이 부정·부당수급된 것으로 적발됐다.

당·전복익 산을·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운영 실태 특별점검 결과(2018.8)'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지급된 정부지원금 67.31억 원 중 무려 33%에 달하는 22.08억 원이 부정·부당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8년간 정부지원금의 1/3이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적발된 정부지원금 부정 편취는 허위서류 제출, 소송보험료 및 보험기간 분할계약, 기업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 직원 등이 대납, 소송보험 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지원금 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편취가 19.6억에 달해 전체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배숙 의원은 "무려 8년간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의 33%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편취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정교한 설계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부정·부당 편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부실 검역 '민낯'

미승인 LMO 유채 대량 방출 임의로 결과 판정 후 통과시켜



성검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국경 검사 과정에서 통관되어서는 안 되는 미승인 LMO가 환경에 방출되는 사건 발생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미승인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환경 방출된 사고는 필수 등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경제위원회 징계 의결서'를 보면, 농림부 검역본부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시킨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 받았다.

단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다. 미승인 LMO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괴물 유채꽃'은 전국 98곳에서 발견되었고, 올해에도 21곳에서 LMO 양성체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조제를 사용해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유채가 대량 서식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정부 중앙경제위원회는 '미승인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 관련 '검역당시 LMO 검사시료 수거 및 간이속

당시 검역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에 의거 미승인 LMO의 경우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중 체크를 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 검사만 수행했다.

또한, 유채 종자 시료 채취는 식물검사용 50g과 LMO 검사용 50g, 총 100g의 시료를 채취해야 했음에도 각각 25g씩 50g만 채취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김중희 의원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괴물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위협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일차적으로 검역을 책임지는 검역당국에서 규정을 어겨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하였고 LMO 작물 추적, 폐기, 사후 관리 등에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후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가짜뉴스 온상 의혹

에스더기도운동 고발돼

가짜뉴스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유포한 의혹이 불거진 극우성향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지난 5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에스더기도운동 측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해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에 보고하면서 '박근혜를 위한 인터넷 사역' 명목으로 1년간 운영경비 5억5000여 만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민중당은 고발장을 통해 "에스더기도운동이 박근혜정부 시절 '우파단체 활동가'를 양성해왔다며 국정원에 43억여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동안 이명박정부 때의 국정원 문제는 많이 드러났지만 지난 박근혜정부 하에도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이러한 의혹이 각각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유라시아 철도 퍼포먼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여 유라시아 철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석방 61일만에 재구속

조윤선 국정원 특별비 수사 혐의는 무죄 판단...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합계 재구속 기로에 섰던 조윤선(52) 전 문화부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관리대상방해 등 혐의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 다"라며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합법로 진보·보수가 불균형 상태라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라면서 "이런 행동의 경위와 파장에 비추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별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 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시점은 논의 후 결정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가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도 앞으로 일반 행정부처가 매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준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심재철 의원 건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가 마치 잘못 사용해서 감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오해가 많아 유엔대 사무총장이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사무처에서 논의한 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면 그때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업무추진비는 113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증가했다. 반면 특수활동비는 65억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기존 특별비로 삼임위원장이 삼임위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특별비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보전해야 해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뉴시스

전북의 핵심 '태양광메카'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공장 운영 | 1989년부터 30여 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 직·간접 고용창출 인원 2,500 명 (2017년 12월 기준) | 안전하고 주민친화적 사업장 운영

전주매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OCI 군산공장

안전에는 프로입니다. 호모 로보인 안전의식

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 **OCI**